

도덕성 외친 盧도 비리 늪 못피했다

“이권개입땀 패가망신” 큰소리 치더니...

형·측근 이어 부인까지 금품수수 혐의

도덕성을 최고의 강점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과거 정권과 똑같이 비리사슬에 묶여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무기로 거물 정치인으로 우뚝 섰고 급기야 정권을 거머쥐었다.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1989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명패를 던지며 불의에 항거하는 정치인의 대명사로 떠올랐으며 지역주의 맞서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용기도 보여줬다. 특히, 2002년 대선후보 시절엔 “불법정치 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민초들의 ‘패지 저금통’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재임 중에도 노 전 대통령은 도덕성에 대해선 유달리 집착과 자부심을 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주변에 경고했고, 친형인 건평씨의 청탁 의혹에는 “사골에 있는 벌 불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지 말라”고 일갈했다.

지난 2003년 10월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재신임”이란 승부수를 던졌으며 그즈음 대선자금 수사 때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

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토록 도덕성을 기반으로 권력을 지탱한 참여정부의 뼈대는 이번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를 전후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

형 건평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씨는 건평씨와

함께 세종증권 매각 로비를 청탁하고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때 청와대의 사정 칼날을 쥐었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참여정부 시절 최고 실세였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2억원과 미화 4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민중당 한 당직자는 8일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며 “이 정부가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참여정부에) 이 같은 비리가 있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를 받았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 친구이자 참여정부 집사로 통했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체포됐고, 노 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마저 조세포탈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참여정부 실세였던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도 여러 기업인한테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 서열과 인사를 하면서부터 검찰과 각을 세웠다. 이런 검찰 개혁 방향에 평검사들이 반발하자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에 직접 나섰다. 서로 상처만 입고 헤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 정치적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취재진과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특별조사실시 중수1과장이 조사

■ 盧 부부 언제·어떻게 조사받나

알려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연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APC 계좌추적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돈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권 여

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조사 방식에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소환조사가 있지만 소환조사 이외의 방법이 선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과거 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조사가 이뤄진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돈 거래의 역사가 거액인데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소환조사가 결정되면 대검 청사 내의 특별조사실인 1120호에서 우병우 중수1과장이 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실의 면적은 약 51㎡로 조사실 중에서는 가장 넓고 화장실은 물론 샤워기와 소파 등의 간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는 1995년 11월 6공화국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연합뉴스

‘막가지는 거죠’ 盧, 檢과 질긴 악연

‘평검사와의 대화’때 문제 언급 검사들 박연차 비리·盧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이쯤 되면 막가지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평검사들과 가진 첫 공개대화에서 한 발언이다. 이 자리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게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이 발언뿐이었다.

노동·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좋지 않았던 검찰과의 관계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내내 악화일로였다. 검찰을 이용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뢰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이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 서열과 인사를 하면서부터 검찰과 각을 세웠다. 이런 검찰 개혁 방향에 평검사들이 반발하자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에 직접 나섰다. 서로 상처만 입고 헤어졌다.

당시 대화에서 “(SK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이끈 이석환 검사는 현재 대검 중수2과장으로, 또 “검찰 중립 약속이 대통령 혼자만의 결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건평씨 문제를 언급했던 이정만 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으로 이번 ‘박연차 비리 의혹’ 및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검찰의 반발을 샀는가 하면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별도의 공직부패수사기구 설치를 추진하려다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8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사권자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위치가 바뀐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박지경기자 jkpark@

“강금원은 호남사람 의리 보여주려 했다”

안희정 최고 흠피서 공개변론 눈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며 공개변론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안 최고위원은 특히 ‘호남인의 의리’를 강조한 전북 부안 출신의 강 회장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바보 강금원’으로 불렸다.

‘호남인의 의리’ 부분에선 성격은 다르지만 고흥 출신으로 영어(齋圃)의 몸이 되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해 ‘의리의 돌쇠’란 별명을 갖고 있는 장세풍 전 안기부장을 떠올리게 했다.

안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강금원 회장을 위한 변명’이란 글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지역주의 극복, 원칙과 상식의 세상을 향한 그의 신념이 현실에서는 늘 낙선과 시련이라는 대가로 돌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

다”며 “같은 논리로 강금원 회장을 ‘바보 강금원’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을 내내 놓고 힘도 백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함께 해주신 분은 결국 강 회장이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현직 대통령의 서슬 퍼런 위세에 기가 질려 발길을 끊고 있을 때, 그분만이 봉하마을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 회장은 ‘젊었을 때 호남출신으로 부산에서 사업했다. 특하면 호남사람 의리 없다, 신용 없다고 하지만 나는 보여줄 것이다. 권력에 부나방처럼 달려들던 수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대통령 옆에 있음으로써 호남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고 싶다’고 했다”며 “‘부산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면, 나 또한 호남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노 충격 “할 말 잃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친노(親盧) 진영이 극심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이광재 의원이 구속되고 서갑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엮이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마저 박 회장과 관련성이 드러나면서 활말을 잃은 상태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8일 “상황을 일단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만 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도 “말씀드릴 게 없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물론 항변의 목소리와 표적 수사에 대한 울분은 존재했다.

당내 한 친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소명으로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박 회장 간 500만 달러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a 'Quiz' game, and a '남성경관' (Men's Police) recruitment advertisement. The '남성경관' ad lists benefits like a 30-60% salary increase and a 10% wage supplement,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cruitment center.